

# 자료분석

## 누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나?

### 민간사찰이 총선에 미칠 파장 분석

-2007년, 2010년, 2012년의 전국조사 결과 비교-

\*이 자료는 2012년 4월 5일(목) 작성된 것으로,  
한상진사회연구소([www.hantheory.org](http://www.hantheory.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한상진

-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베이징대 초빙교수
- 한상진사회연구소 소장
-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이사장
- 문의: 010-9971-8474, 02-875-8474

# 누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나?

## 민간사찰이 총선에 미칠 파장 분석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베이징대 초빙교수

### 시작하며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광범한 민간사찰의 내용과 방법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정치적 공방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권력 기관이 민간인의 뒤를 캐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면 진정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신체의 자유에 있다고 할 때,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그럼에도 코 앞에 다가온 총선 때문인지 정치적 혼탁이 극심하고 최소한의 정치적 윤리마저 사라진 느낌이다. 우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시민의 기본권 유린에 책임을 지려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반대로 시민이 훤히 내다보는 알팍한 물타기의 수법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 심지어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면서도 민간인에게 사찰의 피해를 준 현 정부의 몸통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비겁한 생존 전략을 쓰고 있다. 시민의 양심과 역사의식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1987년 이래 5 차례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6 차례 국회의원 총선을 치렀다. 두 번에 걸쳐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이로써 정치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정착되었다는 해외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알리는 심각한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과 함께 이번에 터진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은, 우리가 극복한 것으로 믿었던 권위주의 체질이

권력집단의 수요에 부응하여 되살아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싸우는 여야의 공방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국민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하겠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 눈 높이, 체감지수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 시민의 기본권 추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시민의 기본권 추이를 보면, 한국정치의 현주소는 명확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2007년 1월의 전국여론조사<sup>1</sup>, 2010년 1월의 전국조사<sup>2</sup>, 2012년 3월의 전국조사<sup>3</sup> 결과를 비교해보면 객관적 추세가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해진다는 것이다. 세 번에 걸쳐 동일하게 물었던 설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에서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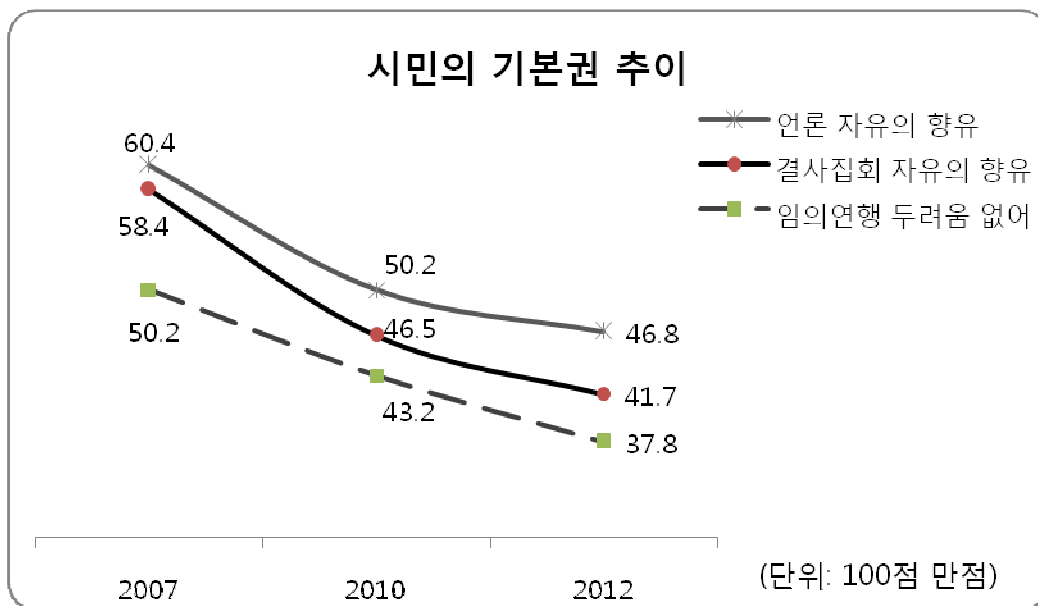
내 용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보통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느 누구도 임의 연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sup>1</sup> 이 조사는 Transformation Research Initiative (TRI: 사회변동 선도연구)의 국제연구팀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설문을 이용했으며 한국을 대표하여 필자가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에 의뢰하여 인터뷰의 방식으로 표본을 수집했다.

<sup>2</sup> 이 조사는 한상진 사회연구소가 갤럽에 의뢰하여 인터뷰의 방식으로 표본을 수집했다.

<sup>3</sup> 이 조사는 한상진 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인터뷰의 방식으로 표본을 수집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시민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데는 추호의 의문도 없다. 그러나 이 두 권리는 다소 추상적이다. 이에 반해 신체의 자유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지키고 이동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그러하듯이, 임의연행은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권력의 남용에 속한다. 긴 권위주의 시대를 격어 온 우리 국민에게 임의동행의 두려움은 사뭇 민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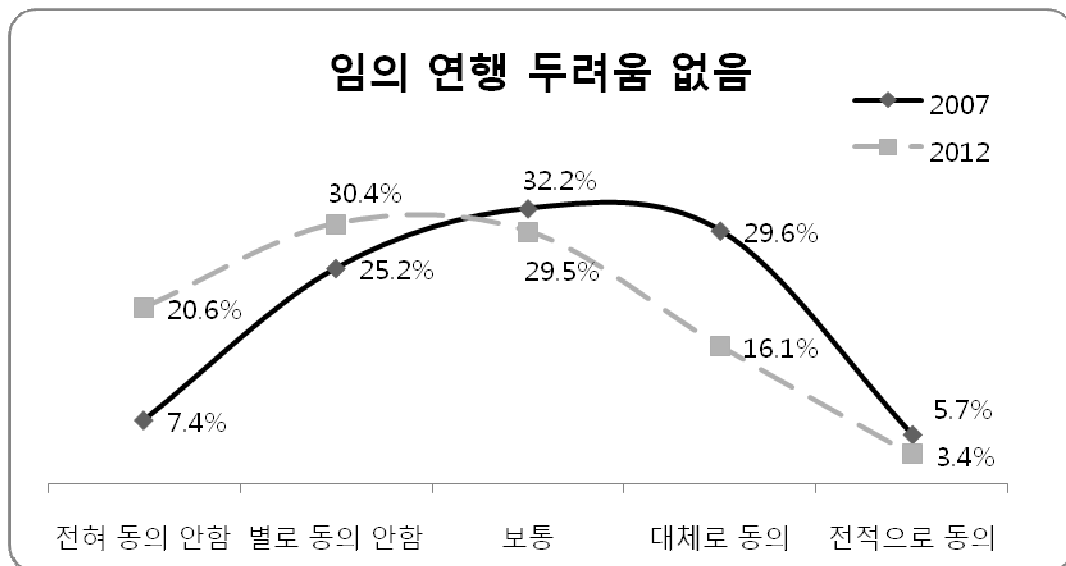


위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이명박 정부의 5년 기간을 통하여 시민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일관되게 현저히 하락하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당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60.4점,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체감지수는 58.4점이었고, 임의동행의 두려움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의 체감지수는 50.2점이었다. 세 가지 기본자유에 관하여 국민의 체감지수는 50점을 상회했다. 그러나 2010년을 지나 2012년 3월의 조사결과를 보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46.8점으로, 집회결사 자유의 체감지수는 41.7점으로, 그리고 임의연행의 두려움이 없다는 국민의 체감지수는 37.8점으로 현저히 하락했다. 이것은 개인의 신념이나 정파적 이해와 무관한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다. 박근혜 위원장이 공언했듯이, 국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나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한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권력정치의 모습은 구태의연하다. 시민의 기본권 위축을 알리는 빨간 경고등이 켜졌건만, 책임을 져야 할 집권층 가운데 국민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는 정치인이 없다. 그저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에 급급하고 있다.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슬로건은 있지만 정치윤리와 책임이 실종된 정치적 수사에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 권력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는 인상만 강화되고 있을 뿐이다.

시민의 기본권은 복지보다 더 선차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룬다. 물론 여야가 최초로 복지경쟁에 나서는 것은 시대의 요구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는 재정투입을 요구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은 아무런 재정 부담 없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실천하는 좋은 정부를 유권자가 선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점에서 선거는 유권자에게 좋은 정부를 선택하는 길을 열어주는 탁월한 제도이다.

### 누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러면 2012년 3월의 시점에서 누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가를 살펴보겠다. "임의동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에 "전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20.6%)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30.4%)는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대체로 동의한다"의 16.1%, "전적으로 동의

한다”의 3.4%는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보통이다”에 응답한 29.5%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는 중간의 경우이다.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51.0%의 응답자가 과연 누구인가의 질문이다.

우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두려움은 2040세대에서 의미 있게 높다. 30대의 경우 61.6%, 20대의 경우 59.2%가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은 응답자 전체의 51.0%보다 상당히 높다.
- 2)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보다 두려움을 느낀다. 대학졸업 이상의 경우 58.9%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낀다.
- 3) 거주 지역으로 보면 충청권 주민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 (59.8%). 서울, 호남, 제주 주민들의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높다.
- 4) 직업으로 보면, 화이트칼라의 두려움이 60.3%로서 블루칼라의 53.6%보다 높다.
- 5) 중산층 안에서 보자면 중산주류에 비해 중민이 임의동행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58.6%).
- 6) 주거 형태로 보면 자가주택자의 47.4%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반하여 월세 거주는 60.0%가 두려움을 느낀다.
- 7) 이념성향으로 보면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보는 집단에서 임의동행의 두려움이 현저히 높다(65.6%).

## 임의동행 두려움의 사회적 배경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화이트칼라 층이 왜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일까?

명백한 점은 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짓밟는 범죄행위듯이, 권력기관에 의한 일방적 임의동행은 법이 금하고 있는 권력의 남용이라는 점이다. 한 보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동행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은 본인의 동의를 없는 임의동행에 의해 수사를 할 경우, 증거가 나오더라도 증거능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 이전부터 임의동행에

의한 증거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무죄선고를 해왔다. 일방적 임의동행은 권력남용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률제도는 권력에 의한 임의동행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법률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현실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화이트칼라 층에서 임의동행의 두려움이 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현실에 대한 이들의 판단이 불안감으로 들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의 정치가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보다 이를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역진화한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보에 밝고 참여의식이 강한 이들은 과거의 권위주의로 회기 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점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에서 발견되는 정부 여당에 대한 높은 불신에서 쉽게 확인된다.

### **민간인 사찰에 연관된 정치적 파장**

이 점을 보기 위해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51.0%의 응답자, 즉 52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이 결과는 민간인 사찰이 불러오는 정치적 파장을 생각하는 데 상당히 암시적이다.

- 1) 2012년 3월의 시점에서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여당, 즉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전체응답자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26.7%이나 임의동행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의 지지율은 15.9%에 불과하다.
- 2)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의 다수, 44.6%는 지지정당이 없는 이른바 무당파층에 머물고 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무당파층의 비율은 39.8%이다.
- 3) 임의동행의 두려움과 현정부 국정운영의 평가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 현정부의 국정운영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극단적 평가에 전체 응답자의 28.6%가 동의했지만,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42.6%가 동의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61.8%가 현 정부에 비판적임에 비해,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78.4%가 비판적이다.
- 4) 임의동행의 두려움은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비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 민주정부보다 현 정부가 "훨씬 잘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진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2%가 동의했지만,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48.8%가 동의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합친다면, 전체 응답자의 56.3%가 현정부가 과거정부보다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보인 반면,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73.8%가 부정적 평가에 합류했다.

- 5) 더욱 흥미로운 점은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임의연행의 두려움 사이의 관계이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전체 응답자의 44.1%로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 26.7%보다 상당히 높다. 이것은 박 위원장 개인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44.1%(452명) 가운데 40.3%는 임의연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공유하면서도 박 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박위원장이 불법사찰과 같은 시민의 기본권에 관한 쟁점들에 관하여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거나 몰타기 식의 수법에 의존할 경우 그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약한 지지층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

## 맺는 말

이상의 분석에서 분명한 점은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현정부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이 야당 지지로 모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수는 무당파층에 속해 있다.

현재의 선거 정국은 여권과 야권이 각각 30% 정도의 지지기반 위에서 40% 정도에 달하는 무당파층을 겨냥하여 혼신의 경쟁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무당파층에는 정치적 관심 자체가 약한 집단이 있고 정치적 관심은 크나 지지정당을 발견하지 못한 집단이 있다. 임의동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 가운데 무당파층에 속한 사람은 후자, 즉 정치적 관심은 크나 지지정당을 발견하지 못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현 선거정국에서 승패를 가르는 한 뇌관은 여야 정당이 고정 지지기반을 다지는데 멈추지 않고 무당파층, 특히 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지지정당을 발견하지 못한 광범한 집단에게 새 정치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정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삶 속에서 체감하고 있는 국민의 눈 높이를 돌아와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정치비전을 제시하는 데 귀중한 의미를 갖는다. 누가 되살아나고 있는 권위주의의 악폐를 깔끔



히 청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진정성 있게 앞장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정당과 정치인이 넓은 중원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임기응변의 수법으로 사태를 호도시키려고만 한다면, 기존의 지지층 가운데 약한 지지층은 이탈할 위험이 있다.